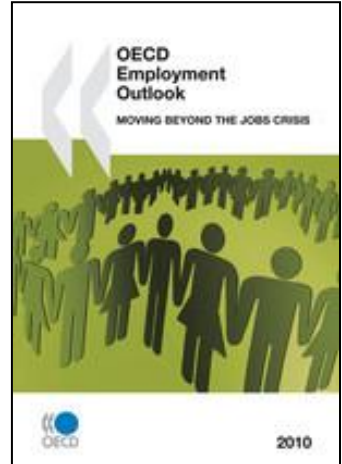


# OECD *Multilingual Summaries*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Moving beyond the Jobs Crisis

Summary in Korean

### 2010 년 OECD 고용 전망: 일자리 위기를 넘어

국어 개요

- OECD 고용 전망은 OECD 지역의 노동 시장과 고용 상태에 대한 OECD 연례 보고서이다.
- 2010 년도 보고서에서는 금융 및 경제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OECD 국가와 핵심 신흥 경제국은 서로 크게 다른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 몇몇 국가는 실업이 매우 급증했던 반면 다른 국가는 일자리 유지 수단으로 단축근무제도를 장려함으로써 실업 증가를 억제했다.
- 위기에 직면하여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재정적 제약이라는 구속이 커지면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 2010 년도 보고서에서는 OECD 노동시장의 노동력 유동성을 면밀히 평가한다. 모든 국가에서 근로자나 일자리는 쇠퇴하는 기업 또는 분야에서 성장하는 기업 또는 분야로 지속적으로 재할당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유동성으로 얻게 되는 생산성 수익을 최대화하면서 이로 인한 노동자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을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
- 본고에서는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 고급 인력의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 일과 가정생활의 화해 및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고용 촉진을 꾀하는 정부에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 회복이  
진행 중인데...

---

세계 경제는 반세기만의 최악의 금융 및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는 있으나 노동시장에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려면 시간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경기 회복이 확산되고 향상되는 동안 고용 성장은 여전히 주춤하고 있다. 2010년 1.4분기까지 2년 동안 OECD 고용은 2.1% 줄었으며 실업률은 50여 퍼센트 증가한 8.5%로 1,70만 명의 추가실업자를 양산했다. 여기에다 실망실업자와 불완전 고용자까지 합해 폭넓게 실업자를 집계하면 거의 2배 되는 수준에 이른다.

---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  
증가는 견실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국가에서 축적된  
대규모의 노동시장 침체를 신속히  
흡수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

실업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수 있고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이 최근 OECD 예측에서 상향 조정되긴 했으나 경기 회복세가 지금의 높은 실업과 불완전고용을 빠르게 흡수할 만큼 활발하진 않을 것이다. 사실, 최근의 OECD 예측에 의하면 2011년 말까지 OECD 실업률은 8%를 웃돌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 상태를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면서 순환적 실업의 급증이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은 국가마다 현저히 달라 대규모 노동 이탈이 실업과 비활동성의 큰 증가로 이어진 국가가 있는가 하면 노동 투입 감소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은 국가도 있다. 전자 국가 경우, 활발한 고용 성장이 실업 방지에 필수 사항이라면 후자 경우에는 경기 회복기에도 고용 창출이 저조한 상태인 소위 고용 없는 회복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

OECD 경제는 전례 없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고용 감소라는 2개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침체 초기부터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신속히 확대했다. 올해 초에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2010년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투입할 재원을 현수준에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재정 적자 감소에 대한 압력이 급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최소 재원 할당이라는 힘든 결정에 맞서야 했다.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적절한 재원 조달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다. 그러나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가장 불이익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노동수요에 대한 지원책은 기존의  
일자리 유지에서 고용 창출의  
활성화로 발전해야 하는데...

---

경기 침체 동안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노동 수요 유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대책이 마련됐으며 특히 해고의 대안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장려되었다. 본고에서 입증되었듯 공공기관의 단축근무제도는 경제 위기 기간 동안 일자리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상당한 근로시간 감소가 초과근무 단축, 노동시간 평균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결과이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 임금 외 노동비용을 절감하여 노동 수요를 유지한 국가도 많이 있었다.

경기 회복이 탄력을 받으면서 경제부문 간, 기업 간에 생산을 높일 수 있는 노동 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근로단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긴축재정 기조는 임금 외 노동비용의 일괄적인 감축보다는 고용창출 목적의 보조금에 보다 주력하여 특히 장기 실업자나 기타 취약층의 사중손실 증대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단축근무제도 사용의 보급화는 경기순환주기 동안 최선의 단축근무제도 사용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국가마다 참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위기 이전부터 단축근무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은 경기 침체기에 이를 새로이 도입한 국가에 비해 참가율이 훨씬 높았다. 타이밍이 결정적인 단축근무제도는 침체 초기 단계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두기 쉽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어려웠던 만큼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단축근무제도를 호황기에는 소규모로나마 계속 잘 활용하면서 불황기에는 제도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일시적으로 변화하여 참가율 증진을 장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업자들의 소득 보조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효과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

장기 실업이 늘면서 소득 보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수당 혜택 기간이 보통 짧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좁은 국가에서는 침체기 동안 수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수혜 확대는 장기 실업자가 뚜렷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당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수혜 확대와 더불어 구직 노력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공공직업안정기관(PES) 직원이 부족하거나 점점 다양해지는 구직자를 다루기에 관리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특히 어려운 과제다. 실업 수당이 위기 이전에 이미 상당히 관대한 수준이고 널리 사용된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기 대응조치를 경기 회복기에 단계적으로 신속히 없애야 한다.

---

재취업 서비스는 구직자를 생산적  
일자리로 신속히 복귀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

효과적인 활성화 전략은 OECD 국가들이 위기 이전에 낮은 실업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회복기에는 구직자들이 신속히 고용상태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성화 정책은 경제 여건에 맞출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구직활동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했으며 또한 직업훈련 기회를 재취업이 어려운 실업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등 명확히 대상을 정한 재취업 서비스를 더욱 많이 제공하려고 힘썼다. 특히 지역 노동시장 수요에 연계시킨 직업훈련 투자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현재 여건에서 정당화된 요소다. 효과적인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까지 시간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겠으나 미래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활성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기로 인해 확대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은 일부  
노동 규제의 재검토를 필요로 할 수

---

있다

현 상황에서는 특히 노동 규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고려하기가 힘든 시기이다. 그렇지만 회복세가 속도를 내면서 기업의 채용을 유도하는 적절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시적인 고용보조금과 고용가능성 제고 노력 외에도 임시계약과 영구 계약 간의 고용 보호 차원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시직은 덮이 되기보다는 영구적인 일자리로 향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전략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노동 유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몇몇은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재취직하는 과정에서 소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 규제 개혁은 종합 패키지의 일부로 도입함으로써 적절한 실업 수당, 근로가능성 조건의 엄격한 적용, 잘 고안된 활성화 방안 등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 소개된 입증사례를 보면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일자리 전환을 도움으로써 노동의 생산적인 재배치를 실제로 강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채용 전략 재평가* 보고서에 이러한 뜻이 명확히 나타나는데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촉진이 고실업 해소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실현에 필수 조건이 된 현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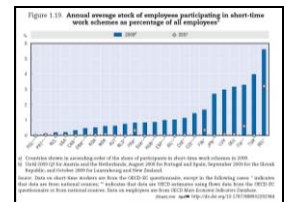
### 일자리 위기를 넘어

본 장에서는 2009년 고용 전망에서 분석했던 2008-09년 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잇따른 일자리 위기에 맞선 정책 대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 침체에 급속히 악화된 노동시장 여건을 다루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비록 탄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현재의 높은 수준에서 뚜렷이 줄어들려면 시간이 걸릴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업 증가는 국가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렇게 다양한 결과는 각국 실질 GDP의 감소율 차이로도 해명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수요가 급락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을 대폭 줄여 대응했던 반면 다른 국가들은 시간 감축, 업무 공유에 중점을 두었다. 침체에 노동 투입 조정 차원에 근무시간 단축의 기여가 컸던 것은 부분적으로 공공단축근무제도가 적어도 단기에 상당수의 일자리를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에 실직자를 위해 소득 보조와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계획했으나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안하고 재정 부담이 늘면서 어떠한 속도로 이러한 확대 조치를 점차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미래의 우선순위는 실업 및 지속적인 비활동성을 억제하는 가운데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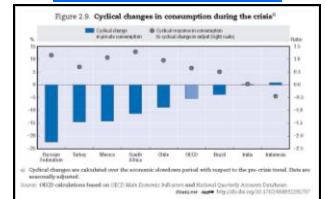
### 신흥 경제의 글로벌 위기 : 일자리 영향과 정책 대응

최근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는 선진경제국에 비해 근로자들이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신흥경제국에 그 사회적 의미가 더욱 컸다. 위기 이전부터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던 국가들은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은 사회안전망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한정된 관리 능력과 재원을 사용하여 수요 증대에 대처해야 하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실업보험 대상 확대, 수당 인상, 자격조건 완화 등의 조치는 정규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소득 보조 개선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기존의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예외적 지급을 하는 것은 새로운 빈곤위험계층뿐 아니라 이미 상황이 악화된 빈곤가구를 보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공공사업

**그림 1.19 : 총 고용인 중 단축근무제에 해당된 고용인의 연간 평균 비중**



**그림 2.9: 경제 위기 동안 주기적인 소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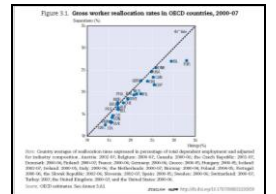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확장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 없고 시행상의 어려움이 줄므로 신규 실업자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위기의 시기에는 공공사업 프로그램에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우대하고 노동 외 비용을 억제하여 고용 창출 건수를 극대화하며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된다.

### 노동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제도적 및 정책적 결정 요소

매년 신규 기업들이 많이 설립되며 기존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며 심지어 닫기도 한다. 물론 많은 일자리가 감축되고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떠나지만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자들이 고용된다. 인력 재배치는 생산성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생산성이 저조한 기업은 일자리를 더 많이 파괴하고 생산성이 뛰어난 기업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데이터를 보면 고용 보호, 실업 수당, 생산시장 규제 등의 제도나 정책이 산업 간의 인력 재배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각국의 고용 보호 법안의 엄격성의 차이가 국가 간에 드러난 고용률과 실직률 차이의 20-30%를 설명한다. 정상적인 경제 여건에서 고용 보호는 주로 직장 간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에서 비고용 상태로의 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력 재배치를 보강하면 소득분배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직자는 보통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근무 여건 악화에 고통을 받는데 특히 경기 침체 기간에 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에 적절한 실업 수당, 근로가능성 기준의 엄격한 적용, 잘 구상된 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결들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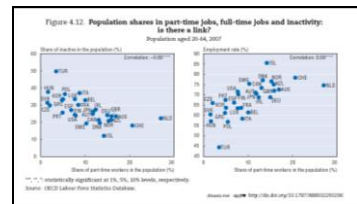
**그림 3.1. 2000-07년 OECD 국가 총 인력재배치율**



### 파트타임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고급 파트타임 일자리 증대를 촉진하는 것은 파트타임 근무 증가가 노동 참가율 증가와 연결된 만큼 인구 고령화에 관심 있는 국가정부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파트타임 근무 확산이 파트타임 인력의 일자리 품질 제고와도 관련돼 있지만 파트타임 직원은 풀타임 직원에 비해 여전히 소득이 떨어지고 일자리 안전도 취약하며 승진 기회도 덜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일 만족도에서 이러한 불이익은 일과 가정 간의 더 나은 균형으로 자주 상쇄된다. 따라서 육아나 학업 책임이 있는 자, 아프거나 곧 퇴직할 자들이 노동시장과 관계를 유지토록 한다. 정부는 희망하는 자가 파트타임 활용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근로자 상황이 변하면 쉽게 풀 타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세제 또는 수당제도의 금전적 혜택과 부적당한 육아제도는 근로시간 증가를 매력 없게 만들어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를 오래 연장하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4.12: 파트타임 일자리, 풀타임 일자리, 비활동성 인구 비중. 상호연관성 여부**



본 개요는 인쇄된 페이지에서 부터 Excel™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 **StatLinks** 를 포함시킵니다!

OECD 2010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